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1년~2025년]

2021. 6.



행정안전부

순서

Ⅰ. 추진배경 ····· 1

Ⅱ. 환경변화 ····· 2

Ⅲ. 성과(2016-2020) ····· 4

Ⅳ. 추진방향 ····· 6

Ⅴ. 중점과제

1. 지능형 서비스 혁신 ····· 7
2. 데이터 행정 강화 ····· 11
3. 디지털 기반 확충 ····· 17

Ⅵ. 디지털정부의 미래모습 ····· 20

Ⅶ. 과제별 추진일정 ····· 21

붙임 1. 주요국 디지털정부 동향 ····· 24

붙임 2. 세부과제 목록 ····· 26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 후, **전자정부 구현**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함**

※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95.7%, 이용률 88.9%, 만족도 98.1% ('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 **OECD 디지털정부평가** '19년 종합1위 / **UN 전자정부평가** '16년·'18년 3위, '20년 2위

□ ICT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임**

* 정보통신기기 보유비율은 **스마트폰**(94.9%), **데스크탑**(51.9%), **노트북**(47%), **스마트TV**(46.1%), **태블릿PC**(26.1%) 순임 ('20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19.10.29. 국무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 ('20.6.23. 국무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14. 비상경제회의)

○ 세계 주요국가들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클라우드 확대** 등 **국가 핵심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임

※ **독일** 디지털전략 2025('16), **호주** 2025 디지털전환전략('18), **미국**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전략('19), **일본** 디지털정부 실행계획('19) 등

□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고 **일상화된 위험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두됨

○ 중앙부처의 일부 서비스가 아닌 **모든 공공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디지털로 쉽게 이용**하도록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

○ 위기극복과 효과적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부**가 요구됨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함

※ 국정과제, 부처·지자체 전자정부 기본계획, OECD 디지털 정부 전략 등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등에 맞게 계획 수립·운영

Ⅱ. 환경변화

1 경제 · 사회

○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고용축소, 사회 양극화** 등 **거시문제** 지속

※ '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년 6월(4.2%) 대비 0.4%P 하향된 3.8%로 예측되며, 백신공급 실패 시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21, WorldBank)

○ 사회 전반에 걸쳐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는 의료·물류·소매 등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비롯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 전반의 위기·보건관리 등을 촉진 ('20년, WEF)

○ 디지털 경제의 자산인 **데이터의 활용·보호·권리강화**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2 행정

○ 경제성장을 위한 신기술 및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 삶의 질 향상**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

○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기기로 자리잡았고, **모바일 공공서비스**에 **민간서비스 수준의 편의성과 반응속도를 요구***함

* 공공에서 참고해야 할 민간앱의 장점은, '스마트폰으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28.9%)', '다양하고 간편한 로그인·본인인증 방식(19.4%)' 등으로 조사 ('20년, NIA 설문조사)

○ 코로나19 위기에서 마스크 앱 개발 등 사회현안 대응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3 기술

○ 민간에서는 통역·분류·추천·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하여 **상용화**되었고 유연한 데이터 공유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음

○ 정보보호, 가명화·익명화 후의 개인정보 활용 등 **책임이 담보된 기술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참고》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서비스 현황

□ [경제·사회]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전환 추세에 본격 대응

○ **데이터 관련 정책, 법·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 중

- (미국) 공개(OPEN) 정부 데이터법 등을 포함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을 제시하고, '연방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성숙도 평가 등 강조
- (영국) '디지털경제법' 수립 이후 '국가데이터 전략'을 통해 기업·정부·시민사회·개인의 데이터 사용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확대 방안 등을 모색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국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호주)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이후 산불, 홍수, 코로나19 대유행 등 정부 운영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전략 2.0' 수립을 논의 중임
- (일본) 안전, 공정,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정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20년 12월 의결·발표

□ [행정] 국민 중심의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 및 행정 혁신체계 확립

○ 디지털 ID, 통합인증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환경**을 구현

- (덴마크) 각종 포털, 공공서비스 및 복지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자 서명인 'NemID'를 발전시킨 'MitID'를 개발('21년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네덜란드) 정부 웹사이트, 교육 서비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DigiD' 제공하고 신분증에 QR코드를 삽입하는 시범 서비스 시행 예정('21년 8월)

○ 서비스 경험 개선 등을 위한 **디지털정부 추진 전담 기관** 및 **민간전문가 운영·활용**

- (호주) 국민의 정부서비스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DTA(Digital Transformantion Agency), 인력양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APSC(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운영
- (일본) 스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가 디지털 대개혁을 위해 내각 직속의 대형 조직인 '디지털청' 출범을 준비('21년 중순 설립 예정)

□ [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 육성 및 공공부문 적용 확대

○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육성·활용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독일) 코로나19 대응력 강화와 종식 이후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투자를 50억 유로로 증가시키는 'AI 전략 개정안'을 발표
- (영국) 영국은 AI 기술이 2030년까지 영국 GDP를 10%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속성을 강조하는 'AI 로드맵' 제시

Ⅲ. 성과 (2016-2020)

□ 종이없는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확대, 사용자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서비스품질**이 개선되고 국민의 **만족도·신뢰도**가 **높아짐**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98.1%이며, 이유로 '일을 빠르게 처리(64.9%)',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56.7%)' 등 응답 ('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데이블기준, 누적) ('19) 44,045개 → ('20) 105,786개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누적) (~'18) 2,036건 → ('19) 2,448건 → ('20) 2,615건

□ 그간의 **전자정부 서비스**와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뉴딜 추진**은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일상을 지속**하는 데 핵심역할을 함

* 전자증명서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민·관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 등

** 정부24로 비대면 민원신청, GVPN·영상회의로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확대 등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데이터3법* 개정**('20.1월)으로 개인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부 공통플랫폼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전환으로 **정보자원의 과학적·효율적 활용기반을 마련**함

□ **UN전자정부평가** '16년 3위, '18년 3위, **'20년 2위** 등 최상위권, **OECD 디지털정부평가 '19년 종합 1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음

< 현황 진단 >

- ► 사용자가 필요한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 ► 기관 간 경계없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공유에 제한이 있음
- ► 국민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간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활용 및 기존 공공서비스와 연계 확대가 필요함
- ► 정보시스템의 80%가 소규모 전산실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이버위협, 긴급상황 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클라우드로 전면전환이 필요함

《참고》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성과 >

1 정부서비스 Re-디자인

- (정부24) 정부서비스(9만여종)·민원(5천여종)·정책정보(100만여건) 일괄 제공
- (병적증명) 블록체인 기반 간편인증(17.7만건), 전자병적증명(2만여건) 이용('20.1~8월)
- (홈택스) 모바일 국세업무 제공('17년 75종 → '18년 98종 → '20년 700여종)
- (공유누리) 행정·공공기관의 시설·물품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이 이용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 (광화문1번가) 국민이 정부에게 제안하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마련

2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

- (방재기상정보) 누적강수량 예측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해대응역량 강화
- (해외안전여행) 방문 국가의 기본정보와 실시간 안전정보 알림
- (모바일 어선출입항) 해수부의 '낚시海앱'과 해경청의 '선박출입항관리'를 모바일로 연계
- (통계정보) 통계정보제공에 챗봇 도입, 다출처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기반 구축

3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 (자동출입국심사) 인공지능을 이용해 안면인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기반 마련
- (스마트 공장) 산업의 지능화로 제조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효율 및 품질 향상

4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 (문화재 방재)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첨단방재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 농작물의 경작 환경 모니터링 및 생산관리 자동화 추진
- (전산보안 통합관리) 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 등 사이버 위협 대응 통합관리
- (클라우드컴퓨팅 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20년 51.79%)

5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 (법령정보시스템) 미얀마에 우리나라의 전자법령정보관리 구축 및 기술전수
- (특허넷) 특허넷의 중동진출을 확대하고 파라과이에 특허문서전자화 지원
- (조달기업 해외진출) '새싹기업' 지정 확대, 해외 입찰정보 및 마케팅 정보제공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케냐, 인도네시아, 페루, 세르비아, 튀니지 등 협력센터 구축

Ⅳ. 추진방향

비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목표 **2025년까지**

1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80% 달성
2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

전략

1 **공공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한다.
2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3 행정·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단 한번만 정보**를 **요구**한다.
4 **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게 한다.

과제

1 지능형 서비스 혁신

1.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2.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3. 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 확산
4.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혁신

2 데이터 행정 강화

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2. 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3. 수요중심으로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확대
4.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

3 디지털 기반 확충

1.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2.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3.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는 국제협력
4.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혁신

Ⅴ. 중점과제

1 지능형 서비스 혁신

1-1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 국민비서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합니다.

○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안내·신청 등을 **국민비서*와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제공

* **국민비서**: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로 미리 알려주고, 온라인 납부 및 각종 민원상담까지 도와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하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임신출산, 고용·구직 등), 나의 생활정보 등의 서비스를 국민비서에서도 안내

○ 종이·우편 방식의 **고지·수납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부가 송부하는 **다양한 고지를 국민비서와 연계**하여 간편하게 납부

※ (예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전기, 수도, 공공시설), 성범죄자고지,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 전화 또는 채팅 한 번으로 민원상담을 끝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민원상담 플랫폼 통합**

- 채팅상담 시 국민비서에서 챗봇으로 먼저 상담하고,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 채팅 상담원으로 전환

- 민원상담 과정에서 기관·담당자가 바뀌어도 국민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는 원스톱 상담체계 구현

※ 국민비서 음성상담과 콜센터 상담 연계로 상담 대기시간 단축

1-2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 내 데이터와 전자증명서로 공공·민간의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 개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본인이 원하면 검색·저장·유통 및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민원신청·처리 절차에서** 제출서류를 없애고*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

  * 모든 서비스에 데이터세트 활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편리하게 제출

○ 개인의 관리·통제*하에 행정·금융·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 내 정보가 어디서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전송 등 요구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

2021년	2022~2023년	2024년~2025년
- 전자정부법 개정(행안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위) - 마이데이터 실증(과기정통부)	-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 구축 (복지부) -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 플랫폼 구축·운영(개인정보위) - 공공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행안부)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복지부)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구축·운영 (개인정보위) - 분야별 활용서비스 연계 (개인정보위)

○ 개인의 전자증명서 외 경력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특허등록원부등본, 기업용 전자증명서, 전자공증문서 등 **산업·사회 전반**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와 통합방안 마련**

-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기업에서도 각종 전자증명서를 다양한 서비스에 널리 이용하도록 발급·수취 등 연계·활용 확대

1-3 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 확산

◈ 디지털 세상에서도 본인임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분산신원증명(DID)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각종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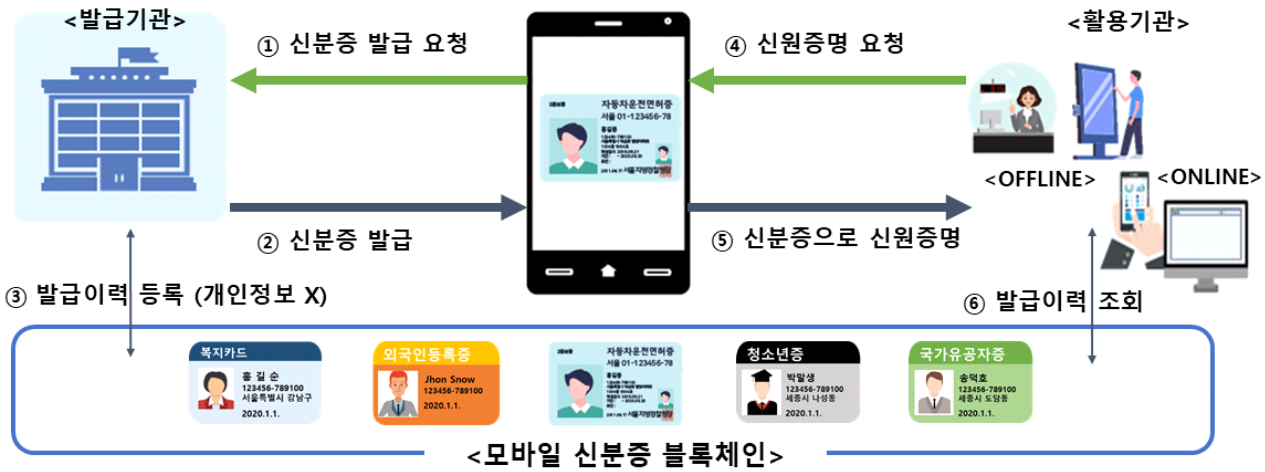
- 모바일 신분증이 **오프라인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신원증명 등**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인 신원을 확인하고 민원서식 자동채움 등 서비스 제공

- **디지털원패스**와 **모바일 신분증**을 연계하여 공공서비스 로그인·본인확인 등 **신원증명 편의 향상**

- **재외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간에 발급체계 마련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신원증명 절차 예시]



○ 다양한 **민간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 민간인증수단 확대, 간편인증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확대, 간편인증 편의성 향상 등

1-4 선제적 · 맞춤형 서비스 혁신

◈ 내게 맞는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확대

*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복지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수급자격, 사업별 선정기준을 분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시

○ 정부24에 로그인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전면 확대

○ 직업상담·훈련, 취업알선, 각종 고용지원금 등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고, 고용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 개개인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 채용면접·직업 상담 등 기존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을 '고용24'에서 연계·확대

○ 기업·행정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대상 **정책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 K-스타트업 창업지원 플랫폼,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플랫폼(중소벤처24) 확대 등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자치민원서비스를 **어디서나,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신청·발급·신고

※ A구의 치킨집 인수를 위한 지위승계 민원신청 시 A구청에서만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가까운 B구청에서도 신청 가능

○ 공공·민간 원격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 등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환경** 조성

- 초·중등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다문화 학생 등 교육배려 대상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지원

2 데이터 행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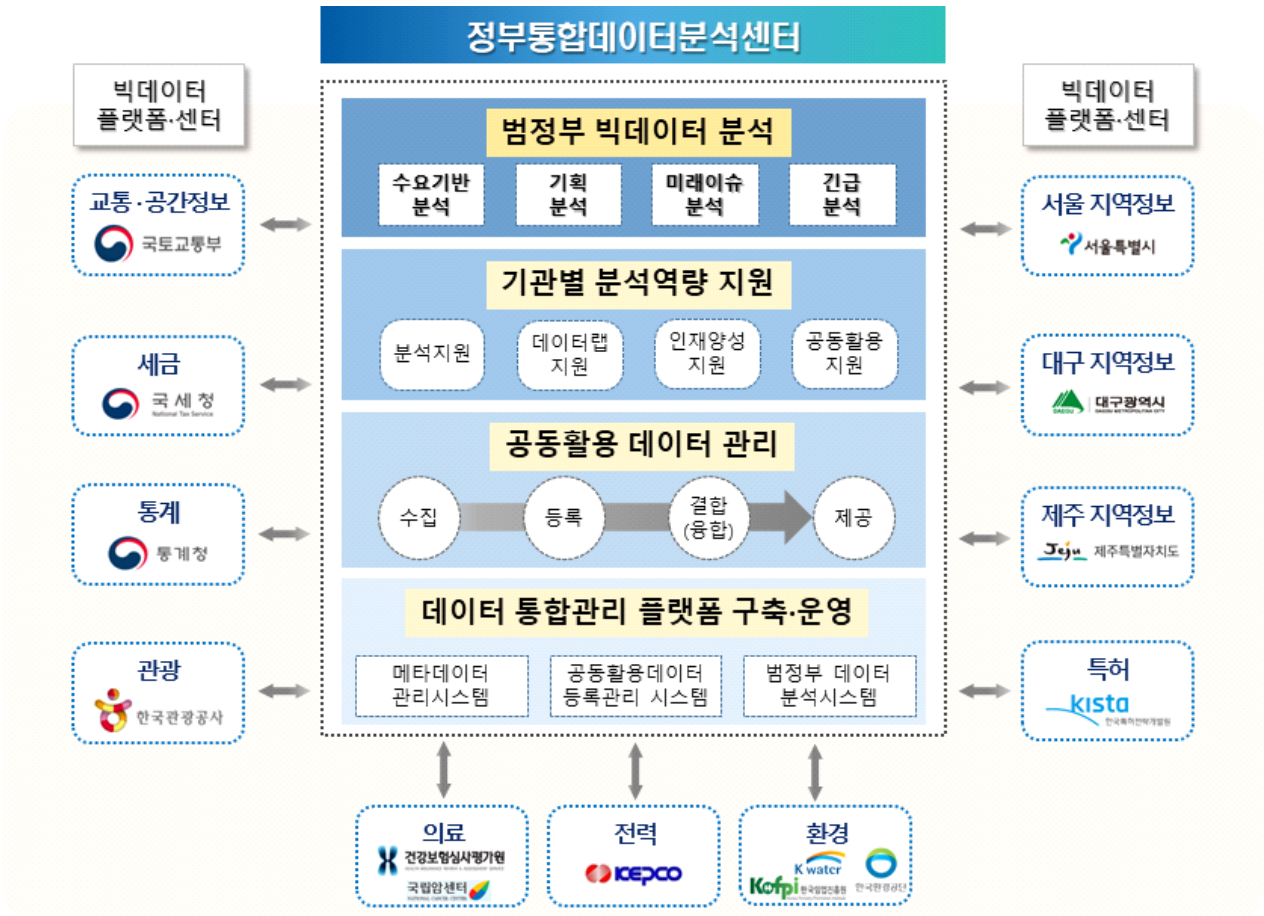
2-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 데이터를 분석하여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교통, 금융, 에너지 등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을 지원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기술 및 분석자원 지원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분야별 플랫폼·센터간 연계 (예시)]



○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데이터 분석·진단으로 취약단계 개선**

※ 프로세스별로 민원제기가 많은 과정을 파악하고 처리단계별·기관별 민원처리 시간, 만족도, 투입자원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개선

-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데이터를 융·결합하여 정책 및 서비스 개선·개발 등에 활용

- 주민의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재난안전, 복지, 생활편의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현장적용 확산**

※ (예시) 교통·안전사고 데이터 분석, 지역별 1인가구·노인복지·초등돌봄 수요예측, 공공자전거·버스·장애인셔틀버스 위치와 이용현황 분석으로 활용도 개선 등

○ 의료·산업·부동산 등 주요 **분야별 데이터 분석**과 **신기술 활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데이터 분석·활용 예시 >

- **(보건·의료)** ①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교육·상담 등을 모바일로 지원하는 예방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②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의학적 목적의 유전정보) 구축으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수출실적 자동신고, 소형화물 전용 인프라 구축 및 물류 데이터 공유·협력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류 통관체계 혁신
- **(부동산)**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장부 및 거래정보를 이해당사자 간 투명하게 공유하고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구현
- (**해상교통안전**) 선박 운항 중 내·외부 상황분석(충돌·좌초 예방경보 등) 및 파고·기상변화 등에 따른 안전항로 제공 등으로 선박사고 신속대응 및 예방강화 지원
- **(사이버범죄 대응)** 불법 촬영물 유포, 저작권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탐지·분석하고 대응
-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전정보 확인이 어려운 대상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 피해구제 지원
- **(고용)**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서비스 제공
- **(민의분석)** ① 뉴스, 민원, 국민의견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제·사회 현안의 예측, 정책대안 제시 ② 민원데이터와 공공·외부·민간데이터를 융·결합하여 정책 및 서비스 개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플랫폼 구축

2-2 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 실시간 현장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 질병정보, 감염경로, 확산예측 등 **방역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표준화·통합 제공**하여 현장 업무 지원

- 감염병 전주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분석·공유하여, 중앙·지자체 등 담당자의 업무에 활용

※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 지진·산사태 감지, SOC 안전성 확인,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 등에 지능형 센서, 웨어러블기기 등 **사물인터넷(IoT) 활용 확대**

- 지능형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시 대응

< 조기경보 관리체계 예시 >

-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 발생지역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센서를 부착하여 지진 감지, 산사태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예·경보시스템 구축
- **(노후시설)** 교량, 터널 등의 이상거동 신속감지, 경고·교통통제 등 초동대처, 구조물 영향분석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자동감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 드론, 로봇 등을 접목한 상시 환경감시망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기반의 환경 감시 효율화 및 환경 사고 예방 강화
- (**항만안전**) 3차원 항만시설물 공간정보(지상, 지하)와 센서를 이용하여, 송유관 등 위험요소 관리를 효율화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 강화

○ 확장현실(XR)*을 적용하여 시설물 관리, 사고조사 등에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 eXtended Reality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기술을 포함하는 개념

- 현장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농산물 품질관리, 산림재해 예측·감시 등에 IoT, 모바일 등 지능화 기술기반 현장 지원체계 강화

- 도로 내 IoT 센서(가속도·GPS·음향센서 등)를 결합하여 노후 교량·비탈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도로안전 확보

2-3 수요중심으로 공공데이터 · 서비스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공공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 공급자(정부) 중심의 개방에서 나아가, **수요자**(시장)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 **비정형데이터**(이미지, 영상, 텍스트, 사물인터넷(IoT) 등) 및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고품질****로 **중점개방**

* 자율주행, 금융재정,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헬스케어(감염병 포함) 분야 등

** 데이터 구축 前부터 '예방적 품질관리'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발굴 등 추진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직접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및 **마이데이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서비스 개시('21.6월), 이후 서비스대상 데이터 추가확대

- **시민개발자**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도 공공데이터를 수집·생성

* (예시) 자원봉사를 통해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장애인 이동권 데이터를 확보,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 가공기업이 보완하여 개방(인도, 점자블록, 계단 등)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공데이터 큐레이팅(curating) 서비스*'** 추진 등 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 전문가그룹 구성, 큐레이션 서비스 지원, 데이터 추천코너 운영 등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민간플랫폼에서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각종 세금 고지·납부 등 국민 활용도 및 개방 효과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개방

※ 대국민 수요조사 및 서비스 민간개방 협의회(민간기업·개방 기관 등으로 구성)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 접점이 높은 서비스 지속 발굴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 확대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

○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결정문, 보도자료 등 국민들께 제공하는 **행정문서를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로 생산·유통

<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 주요내용 >

① 생산 단계부터 데이터 활용을 고려하도록 문서작성 원칙 마련

② 온-나라 문서 시스템 행정문서 처리 관행을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선

※ hwp첨부파일 최소화, 키워드·문서요지 등 작성 의무화

③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 표준 형식(ODF, html, openAPI 등)으로 제공·유통

※ 위원회 결정문(html 및 openAPI), 정책연구보고서(html 등), 채용공고(html, ODF 등), 보도자료(ODF), 공공서식(html, ODF 등)

④ 행정문서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2-4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 소규모 전산실 위주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정보자원의 공유 확대 및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

※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본격 운영, 민간클라우드센터 활용 확대, **공공 클라우드센터 등**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축환경 마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센터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데이터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자동제어 관리**

※ 대전·광주센터 및 대구·공주 센터가 단일 센터처럼 자동 운영·관리

-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지원

○ 문서·데이터, 지침, 통계,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검색·공유하는 업무시스템** 구축

-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공통업무 기반을 통합·연계하여 업무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업환경 제공

- 기계학습으로 정부문서를 생성단계부터 자동분류·저장·관리하고, 문서에 태깅기능을 적용하여 자료의 통합검색 및 공동활용 확대

○ 공공부문 업무망을 **5G 국가망으로 전환**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빠른 업무처리 지원

○ 국가기관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을 구축**하여 안정성·보안성 향상

- 2개의 백본망으로 이원화하여 국가융합망을 구성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통신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프라 제공

- 국가융합망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여 통신망 보안체계 강화

○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하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안관제**

* 대량화·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을 스스로 학습하여 보안 이상징후 감지·대응

3 디지털 기반 확충

3-1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자,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고령자, 장애인 등**에 인공지능 스피커, 웨어러블기기 등 **ICT장비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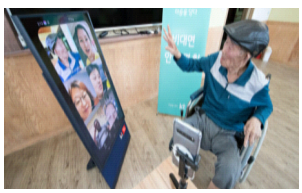
-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수사관 문답에 지능형 서비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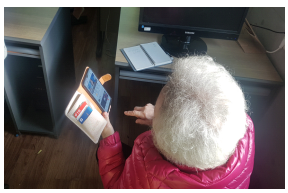
※ 대화형 112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영상신고 활성화, 수사관·피해자 문답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식하고 기록·저장·출력하여 성폭력 보호 정책에 활용

○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활용, 기차표 온라인 예매, 코딩 등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환경 지속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교재 연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자막 등 취약계층의 학습편의 반영

[디지털배움터 교육 예시]



○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모든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웹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로 제공**

- 국민이 디지털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에 일관성 있는 UI/UX*** 적용

* 메뉴 명칭·구성방식, 아이디·비밀번호 체계, 로그인·본인인증·결제 방식 등

3-2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 민간의 참여로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국민의 직접참여** 지원

-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기획부터 구현까지 시민개발자, 기업 등 민간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 시빅해킹(civic hacking):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서비스를 개선시키는 사회운동

○ **민간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기준, 민간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산정 등

- 국민이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모바일 신분증 등을 민간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민간서비스를 선택·변경 가능

3-3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는 국제협력

◈ 국제협력 확대로 디지털정부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 높아진 글로벌 위상으로 **선도국·국제기구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 정부 방향을 마련하는 등 **협력 강화**

- 디지털정부 선도국 회의 개최, 디지털정부 전문가 인력교류, 공동 협력사업(정책·사업 컨설팅, 기술 표준화, K-방역사례 전파 등) 확대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개도국과 협력 강화**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확대, 컨설팅 지원, 사절단 파견, 역량강화 과정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

- 해외진출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기업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포럼 등 국내 이해관계자간 협력 병행

3-4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혁신

◈ 디지털 전환에 선제대응하도록 디지털정부 법제도를 정비합니다.

○ 신원증명 기반 마련, 서비스개방 확대,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디지털 정부 관련 각종 법령·지침·훈령·고시 제정·정비**

- 일반 신원증명과 디지털 신원증명 개념정의, 책임소재, 전문기관 설립 등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신분증 관련 법·제도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 간 연계, 민간이 보유한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권 마련, 지원기관 설립 등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도입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 활용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민원서비스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인공지능 사전 영향평가제도 등 신설 추진

○ 데이터, 인공지능 적용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가명정보 관리·감독 강화, 결합기관 지정확대 등 **신뢰기반의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 데이터 결합연계 전문기관 및 데이터 기업에 대한 가명정보(반출된 가명정보 포함) 활용 및 관리실태, 반출정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운용**하여 공공·민간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 전자정부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범정부 핵심 정보화 사업**에 **적극 반영**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을 통한 추진과제 및 성과계획 관리로 중장기 지속 가능한 과제로서의 연속성 확보

※ 다수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다수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우선적용

Ⅵ. 디지털정부의 미래모습

대한민국정부

지능형 서비스 혁신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는 정부서비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정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로 더 편해진 생활

모든 민원 신청·처리 절차의 비대면 & 디지털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증명하는 나의 신원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

데이터 행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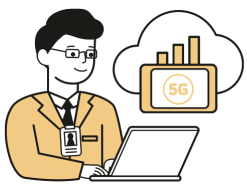
데이터로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으로 객관성·신뢰성 확보



공공-민간의 경계가 없는 정부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하여 민·관 구분 없는 서비스 환경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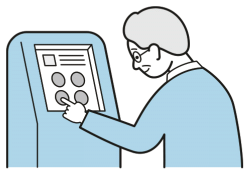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일 잘하는 정부

5G·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 제공

디지털로 여는 좋은세상

2025년 달라지는 미래모습

디지털 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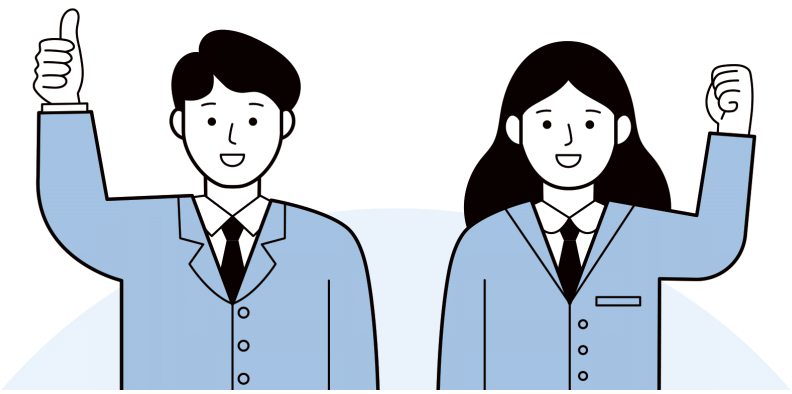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취약계층 맞춤형 ICT 장비 보급 확대와 UI/UX 개선으로 디지털 서비스 편의 향상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정부서비스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기획부터 구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



Ⅶ. 과제별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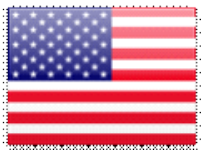
중점과제	추진일정 '21	'22	'23	'24	'25	추진주체
Ⅰ. 지능형 서비스 혁신						
1-1.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 국민비서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구축		확대			행안부 등
○ 민원상담 플랫폼 통합 및 원스톱 상담체계 구현		구축		연계·확대		권익위 등
1-2.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및 활용	구축		연계·확대			전부처
○ 수요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구축	확대				행안부 등
1-3. 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 확산						
○ 전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활용 확대	운전	유공	단계적 확대			행안부, 경찰청, 보훈처 등
○ 범정부 디지털 서비스 통합 인증체계 구현	구축		확대			행안부 등
1-4.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혁신						
○ 선제적·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멤버십)	구축		확대			복지부
○ 모든 수혜서비스 통합 제공 (보조금24)	확대					행안부
○ 한 곳에서 지원받는 고용서비스 생태계 조성 (고용24)	구축		고도화·확대			고용부
○ 중소·소상공인·스타트업 대상 정책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구축		확대			중기부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P	예타	구축			행안부 등
○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확대	확대					교육부, 여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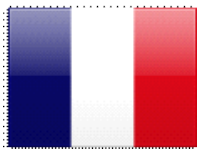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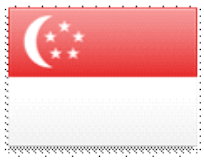
중점과제	추진일정					추진주체
	'21	'22	'23	'24	'25	
Ⅱ. 데이터 행정 강화						
2-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구축·연계					전부처
○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한 민원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진단		개선			행안부
○ 분야별 데이터 분석 및 신기술 활용 확대	구축		확대			전부처
2-2. 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	구축			확대		질병관리청 등
○ 재난안전대응에 사물인터넷 활용	구축					행안부, 과기부 등
○ 지능화 기술 기반 현장 지원체계 강화	구축·관리					산림청, 농림부 등
2-3. 수요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개방·활용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확대					행안부 등
○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구축		확대			행안부 등
○ 디지털 민간서비스 공공부문 도입 확대	확대					과기부 등
○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생산·유통	확대					행안부 등
2-4.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						
○ 공공 정보시스템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	전환					행안부 등
○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구축				행안부 등
○ 공공부문 유선망 5G 무선망 전환	구축		확산			행안부 등
○ 국가융합망 구축	구축		운영			행안부 등
○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관제체계 운영	전환·확산		운영			행안부 등

중점과제	추진일정 '21	'22	'23	'24	'25	추진주체
Ⅲ. 디지털 기반 확충						
3-1.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확대					복지부, 경찰청 등
○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환경 지속 확대	배움터 누적확대			운영		과기부, 인사처
○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일관성 있는 UI/UX 적용	구축		확산			행안부 등
3-2.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 공공서비스 문제 발굴·해결에 국민 직접참여 지원		발굴·확산				행안부 등
○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구축		운영			행안부 등
3-3.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은 국제협력						
○ 국제회의 개최 등 선도국과 국제협력 강화	구축·운영		신규국가 발굴			행안부
○ 해외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개도국과 협력 강화	지원 확대					행안부 등
3-4.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혁신						
○ 디지털 정부 관련 각종 법제도 정비	법제도 정비·확산					전부처
○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구축			확산		개보위 등
○ 디지털 정부서비스 사업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사업 발굴 및 확산					행안부 등

※ 예산에 따라 일부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주요국 디지털정부 동향

국가	주요 정책	주요 서비스
 **영국**	**정부 주도의 내부행정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접근성 개선** : 통합포털·인공지능 음성서비스 도입,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도입 등 **(정책)** 정부기술혁신전략('19), AI 섹터딜('19), 국가 데이터 전략('20), AI 로드맵('21) **(조직)**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	**gov.uk** · 영국 정부의 단일 온라인 통합서비스 창구 · 23개 부처, 412개 기관, 2,000여개의 웹사이트 통합('12~)
 **미국**	**민간 IT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데이터·보안부문 경쟁력 강화** : 신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혁신 개발에 민간 전문가조직 활용 **(정책)** 국가사이버전략('18), 연방 데이터 전략('18), AI Initative('19), 클라우드컴퓨팅 전략('19) **(조직)** USDS(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수행), GSA(디지털 조직 전략 관리), 18F(디지털 전략 컨설팅)	**오픈소스 공유** · 연방 정부에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공유하고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 · 유사 SW 중복개발 방지 · 이메일, 시스템 관리 등 오픈소스 프로그램 공유
 **덴마크**	**ICT 기술 조기도입, 복지분야 현대화·디지털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 공공복지 기술개발 확대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 덴마크 디지털 전략·디지털 복지전략 2016-2020('16), 덴마크 인공지능 국가전략('19) **(조직)** 디지털청(Agency for Digitisation)	**디지털 우편 서비스** · 만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별도의 가입거부 신청이 없으면 디지털 우편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 · 정부공공기관, 병원, 국세청, 보험사 등 기관 및 기업의 우편물을 대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우편 열람
 **에스토니아**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X-Roads 구축 및 보안 인프라 확대** :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전자신분증 도입 등 **(정책)** 에스토니아 디지털 아젠다 2020 업데이트('18), Kratt AI 보고서('20) **(조직)** e-에스토니아위원회(e-Estonia Council)	**전자신분증(e-ID)** · 블록체인 암호화 및 온·오프라인 인증수단 · 디지털 인증서 칩을 e-ID에 내장하여 온·오프라인 인증 및 건강보험, 투표, 세금납부 등 2,500여개 서비스에 사용
 **호주**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100% 및 정부기관 클라우드 투자전략 개발 **(정책)** 2025년 디지털 전환 전략('18), 보안 클라우드 전략('17) **(조직)** 디지털혁신원(DTA), 공공서비스위원회(APSC)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운영 · 공공데이터의 보안·안정성 확보, 빠른 서비스 이용, 최신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테스트 지원

국가	주요 정책	주요 서비스
 **독일**	**공익데이터 활용 디지털 경제육성 및 디지털 인프라 기반 마련** : 4차산업 연계 디지털경제 육성,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EU 연계 데이터 공간 구축 추진 **(정책)** AI 전략 개정안('20), 하이테크전략 2025('18), 노동 4.0 백서('17), 디지털 전략 2025('16), **(조직)** 디지털부(디지털 정부혁신), IT Council (정보기술 분석, 행정 디지털화 등)	**지리정보 데이터포털** · 통합포털에서 독일 전역의 지도 모델링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개방하여 개발자, 학생 등이 활용 · 환경, 농어업 등 13개 분야의 지리정보, 바다, 기후, 토지 등 심층 분석정보를 제공
 **프랑스**	**국가차원의 공공데이터 지속개방과 단일화된 서비스 제공** : 디지털공화국법('16)에 공익데이터 개념을 명시하고 공공서비스 단일 플랫폼 추진 **(정책)**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17), 에따 플랫폼('15) **(조직)** 공공전환 범부처국(DITP), 디지털정부국(DINUM)	**France Connect** ·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단일 로그인으로 이용하도록 플랫폼 구축 · 쉽고 편리하게 로그인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시티 정책 및 응용기술 선제도입** : 도시국가형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접근성 향상 등을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접근 **(정책)** 디지털정부 청사진('18),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17) **(조직)** 디지털정부실(SNDGO), 정보기술청(GOVTECH)	**버추얼 싱가포르** · 2025년 스마트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건물, 도시, 인프라, 녹지 등을 가상화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3D가상화 · 환경·재난, 사회기반시설, 국토안보,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제공
 **일본**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확대, 디지털 신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 추진** : 모바일 시스템 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화 기반 사회혁신 가속화 **(정책)**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선언 및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20), 디지털정부 실행계획 개정('20) **(조직)** IT 종합전략본부·종합전략실, 디지털청('21 예정)	**국세청 서비스** · 온라인 기반 세금 신고·신청·납부 · 관련 법령정보, 활용 가이드를 강의 형태로 제공 · e-Tax, E-gov 등
 **중국**	**국가 정보화계획-산업 전략과의 연계 및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확대** : ICT 글로벌 기업 육성, AI 혁신 허브 구축, 대규모 데이터 센터, 온라인 공공서비스 등 추진 **(정책)** 국가정보화 발전전략('16), 인터넷 플러스('15) **(조직)** 중국국가정보센터	**국가서비스 플랫폼** · 통합 로그인 등 국가 정부서비스 플랫폼 추진 · 43개 부처, 1,142개 서비스 및 31 자치구의 336만 서비스 제공 · 통합 본인인증, 공무원 건의사항, 서비스 검색, 서비스 온라인 평가 등

붙임 2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1. 지능형 서비스 혁신	
〔1-1〕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국민비서 확대 ·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접수·신청·처리까지 지원하는 국민비서, 챗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통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 정부기관 콜센터를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 제공 · 생애 주요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 신청으로도 종합안내, 패키지로 편리하게 이용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시스템 구축 · 경찰우편 자동화시스템을 확장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중계시스템 구축	**경찰청**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 모바일 홈택스 및 모바일 송달(고지·안내) 확대	**국세청**
홈택스 2.0 통합플랫폼 구축 · 납세자가 필요한 신고·납부·환급정보 및 개인형 거래·소득·재산 데이터체계 구축	**국세청**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민원상담 24시 체계 도입 · 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일반인·농업인의 민원상담 내용을 분류·DB화 하여 인공지능이 분석·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활용 · 정부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활용여부를 결정,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 등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면 디지털정보로 검색·저장·유통하여 데이터 주권 구현, 금융 등 신산업 육성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 ·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발굴, 신시장 육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정보 교류	**보건복지부**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 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서 조회·저장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 · 병역이행 증명서 등을 스마트폰에 발급·보관·이용, 사회복무요원증 등 디지털 자격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연계	**병무청**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 행정·공공기관의 증명서, 확인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제출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공증서비스 제공 · 전자공증시스템 신분증에 여권 추가, 전자문서 발급·유통체계 마련 등	**법무부**
시험성적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 시험성적서 발급·보관·유통 서비스 구축 (전자지갑)	**중소벤처 기업부**
모바일 구매확인서 유통관리시스템·간접수출실적증명 전자발급 시스템 ·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유한 주문·상품정보, 적발 동향 등 민관의 데이터 공유·협업	**산업통상 자원부**
온라인증명서 발급시스템 · R&D 과제수행증명서, 용역수행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온라인·모바일로 발급	**산업통상 자원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1-3〕 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 확산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 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확산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전자서명 공통기반 마련 ·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전자서명을 쉽게 사용하도록 공통기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생체인증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생체인증 신원확인으로 출국 시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탑승 이용	**법무부**
전자여권 위·변조 검사를 위한 National PKD 구축 · 전자여권 위·변조 검사를 위한 National PKD 구축	**법무부**
재외국민 디지털 본인인증 기반 구축 · 재외국민의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전자여권, 화상통화 등)	**외교부**
비대면 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 온라인·화상 영사민원 확대, 재외국민 본인인증 구축	**외교부**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구축 · 편리한 입국지원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신청-심사·통보-활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법무부**
〔1-4〕 선제적 · 맞춤형 서비스 혁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포괄적 사회보장을 위한 선제적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제공 등	**보건복지부**
국가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 · 한 곳에서 한 번 로그인만으로 보조금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사각지대 해소	**행정안전부**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고용24) · 상담·훈련,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등 개별 시스템 전산망을 고용24(가칭)으로 통합	**고용노동부**
K-스타트업 창업지원 범정부 통합플랫폼 구축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全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축적된 빅데이터 기반의 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중소벤처24) · 중소·벤처·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통합 서비스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자동심사시스템 도입 · 고객·상품빈도·업무 등 분석으로 기업여신 자동심사시스템 도입	**수출입은행**
비대면 신용보증시스템 구축 ·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바일로 모든 과정을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융자신청·심사, 전자약정 및 페이퍼리스 창구 서비스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 디지털 전환 · 전자문서 제공, 중복서류 최소화, 비대면 온라인 신청 등	**중소벤처기업부**
초중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 교실 무선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분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등	**교육부**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 · 개방형 콘텐츠 유통 및 온·오프라인 학습자원 연계·공유, 맞춤형 학습시스템 제공 등	**인사혁신처**
온라인 국가기술자격시험(CBT) 확대 · 산업기사 전 종목 및 기사·서비스 분야 전 종목을 CBT 방식으로 실시	**고용노동부**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 산림휴양·레저 안내·예약서비스 확대, 맞춤형 가상체험 서비스 구축	**산림청**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N-Agrix) 구축 · 맞춤형 농림사업정보의 확인·신청 및 선제적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 운영 등	**해양수산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문화유산 3D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구축 ·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에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선제적·통합적 문화유산 서비스 제공	**문화재청**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 다양한 자치민원서비스를 어디서나,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신청·발급·신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투표), 온라인 비대면 대금청구 등 대민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업무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도입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 맞춤형 세테크 도우미, 전자신고 자동채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면 재구축	**행정안전부**
지능기술 접목 문화서비스 혁신 ·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 봇 서비스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2. 데이터 행정 강화

(2-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비대면·전자조사 체계로의 전환(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 조사를 지원하는 디지털조사(모바일 등) 지원 플랫폼으로 전환	**통계청**
민원행정 프로세스의 지능형 재설계 · 민원행정처리 과정 취약단계를 개선,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과정 기록 빅데이터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분석하여 정책결정에 활용, 제도·기술 지원체계 강화(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행정안전부**
ICT 활용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결과기록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전자상거래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유한 주문·상품정보, 적발·검사 동향, 위해물품 정보 등 민관 데이터 공유·협업	**관세청**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체계 구축 · 개인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수입·통관 및 수출·관부과세 등 전용시스템 구축	**관세청**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 · 국민신문고, 콜센터 전화상담 등 텍스트, 음성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국민권익 위원회, 각 부처·지자체**
AI 기반 사이버범죄(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동영상 유포를 지속 탐지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 해외불법사이트·SNS·P2P 등 불법촬영물 재유포자의 수사단서(IP) 제공	**경찰청**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스팸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으로 능동형 스팸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연계	**방송통신 위원회**
지능화 기반 각종 침해 대응 역량 강화 · 자동화 기반 지능형 차세대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통합체계 구축 등	**문화체육 관광부**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 직위별 적합인재 추천, 전문분야별 인재정보 관리 등	**인사혁신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얼굴인식 및 위험/이상 상황탐지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심사 시 신원검증 보조수단으로 활용	**법무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비대면기반, AI첨단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 보호관찰관 대면접촉신고 위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전자신고 개선	**법무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심사관용 지능형 검색·분류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기반 검색·분류시스템 구축 및 품질향상	**특허청**
신원업무 디지털화·자동화 · 데이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종이서류의 디지털 전환, 모든 업무의 온라인·자동화 처리	**경찰청**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 부동산 정보에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방식을 도입하여 종이증명서 제출 생략, 원스톱 처리	**국토교통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 시스템 구축 ·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법무부**
사전예방 중심의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의 질병유입 전파경로 분석, 가축이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구축 ·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활용기반 마련, 맞춤형 수혜정보 공개, DB 구축 등	**기획재정부**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완성 · 수입식품 안전정보 전달에 사진·음성인식 도입, 위험도 예측모형 구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원스톱 정보 제공 확대 · 희귀의약품 안전공급 개선, 원클릭·맞춤형 정보제공, 의약품 피해구제 통합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보훈심사시스템 구축 · 보훈심사 사례·데이터 수집·정제 및 지능형 심사·처리	**국가보훈처**
통합 디지털증거분석 서비스 개발 ·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기능 개발	**대검찰청**
IoT 지능형 신고체계 구축 · IoT 및 자동감지장치로 정보를 수집하고 119 신고 접수	**소방청**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3차 · 국가·공공 공간정보의 생산·수집·가공·제공에 관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국가 운영에 기초가 되는 핵심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를 고품질로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제공 경로 일원화	**행정안전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중앙행정기관 대상 클라우드 온나라 저장소 통합 등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정안전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2-2) 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IoT 재난안전체계 구축 · 저수지·급경사지 등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디지털 관측 및 계측 시스템 등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농산물품질관리 현장행정 활성화 · 현장 행정처리, 드론을 통한 현장행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드론, 센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림 무인조사 체계 구축 · 무인항공기, 사물인터넷 센서, 위성영상 판독 등으로 산림 무인감시를 지원	**산림청**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및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 · 가뭄지수·산불위험지수 고도화, 공간정보·위성영상·CCTV 분석을 통한 예방·지원	**산림청**
범정부 통합 가뭄관리 정보체계 구현 · 가뭄 특성에 따른 통합 가뭄관리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국민 체감형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선 · 체감형 조기경보, 지진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서비스 고도화	**기상청**
통합물관리 지원 및 선제적 가뭄대응 체계 강화 · 강수량 외 수문기상정보를 반영한 가뭄 판단기준 개선 및 가뭄정보 개선	**기상청**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 광역 상·하수도, 지방 상·하수도에 스마트 물관리(감시·제어)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화학재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정보연계, 상황전파 및 공유 등 현장대응체계 마련	**소방청**
차세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 전국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 현장 통합대응 전반을 지능형 기반으로 구축	**소방청**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 · 감염병 조기 감지 및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핵심 데이터 수집, 감염병 관계기관 연계·활용, 범정부 플랫폼 완성 등	**질병관리청**
항만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술(IoT, 디지털 트윈 등)을 이용하여 시설 이상 징후의 실시간 파악(센서 이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2-3)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개방 · 활용	
공공서비스 API 개방 · 민간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서비스 융합 추진	**행정안전부**
오픈 API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상용 온라인 지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정보 등 API를 연계하여 민간앱으로 제공	**환경부**
국민에게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 등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신속히 선정하고 적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대상 유연화·간소화된 전문계약제도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구축 ·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국가지식 자료의 디지털화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정보 제공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자료를 DB화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활용·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 · 민간(산·학·연·국민 등)에서 각종 연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개방	**국민권익위원회**
(2-4)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공공부문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비대면 현장행정 지원	**행정안전부**
민간 클라우드 확산 지원 ·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 보급·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면 전환·통합	**행정안전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파스-타 기반 멀티 PaaS 플랫폼 구축 및 민간 SaaS 연계허브 제공	**행정안전부**
AI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 운영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보안체계 구축·적용	**행정안전부**
모바일 기반 행정지원 ·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화로 현장 업무의 내실화 및 편의성 제공	**고용노동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통합 · 지자체별 분산 구조의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을 재구축	**국토교통부**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 및 모든 취업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축	**고용노동부**
언택트·AI평가지원시스템 · 다중 플랫폼(PC, 모바일 등) 환경에서 웹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한 화상평가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R&D 평가를 화상평가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영상회의 및 원격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 해외정부, 국제기구 등 주요 인사들과의 영상회의 진행을 위한 비대면 국제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국립외교원**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 시간·장소 제약없이 동일한 PC 환경을 이용하고, 표준화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 구축	**기술보증기금**

3. 디지털 기반 강화

(3-1)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모바일 서비스 전면화 및 단일창구 구축 · 모바일 환경에서 하나의 정부, 통일된 서비스 UI/UX 제공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 스마트미러 등 기술을 민원서비스에 선제 적용하여 취약계층도 쉽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안전부**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전 국민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 생활 SOC를 디지털 역량센터로 구축하여 전 국민 대상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교육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공WIFI 확대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도서관·정류장 등 공공장소 4.1만 개소에 WiFi 신규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 음성인식 피해자 조사시스템 구축 · 성폭력 수사관·피해자의 문답을 자동으로 인식·기록	**경찰청**
지능형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재구축 · 민원인의 사건 개요를 분석하여 범죄 예방, 추가피해 방지 등 지원	**경찰청**
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가정폭력·학대사건 대응을 위한 시스템 연계·개선	**경찰청**
차별 없는 문화재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구축 · 보이스전자책, 문화유산·사진·도서 점자화 등 차별없는 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문화재청**
비대면 청소년활동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제공 ·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3-2)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 사회혁신 플랫폼 구현 ·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자원(노하우, 인력 등)을 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배치	**행정안전부 등 전부처**
민관협력기반 위기대응 프로젝트 추진 · 감염병, 지진 등 다양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령 국민 청원 서비스 · 사회 이슈 입법사항을 수집·접수하여 아이디어·문제점·찬반의견 등 국민에게 공개	**법제처**
대국민 개인정보 소통 플랫폼 운영 · 개인정보와 관련해 국민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토론·공론화할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운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점과제별 주요사업	추진기관
〔3-3〕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는 국제협력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운영 확대 ·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현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협력사업 추진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선도국 협력 강화 · 디지털 네이션스, OECD E-Leaders 등을 통한 선도국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원양어선 조업감시체계 구축 · 원양어선 과거항적 및 조업형태(어획량, 어구사용 영상 등) 등을 분석하여 불법 원양조업의 선제적 예방 및 국제사회 신뢰제고	**해양수산부**
〔3-4〕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혁신	
정보주체 고충·피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 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상담·분쟁조정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창구 제공 · 정보주체가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 등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마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가명정보 결합 신청 및 연계정보 생성·결합지원·관리·감독을 위한 데이터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